

## 사회복지실천의 프레임 분석과 대안모색에 대한 시론

최명민\*

‘사회복지의 새판 짜기’는 상당히 거창하고 무거운 주제이다. 최근 사회복지 연구들에서 주로 관심을 기울여온 이슈들이 사회복지 제도나 정책, 대상이나 실천방법 등이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의 ‘판’ 또는 ‘틀’과 같이 총체적이고 입체적인 통찰을 필요로 하는 논의를 감당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전적인 주제를 체계적으로 다룬 기초발제문은 우리 사회와 사회복지의 방향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의미 있는 글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사회복지의 판을 논함에 있어서 분석틀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발제자의 분석에서 너무 추상적이지도 너무 구체적이지도 않은 레짐 차원을 분석틀로 채택한 점이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썬펠의 체제 구성요소인 사회경제연합, 정체경제제도, 공공정책 등을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 시도는 한국사회의 복지와 관련된 통치체제, 즉 통치성을 다차원적으로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발제자도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분석틀에 따른 논의들이 그동안 발제자가 연구해온 내용들을 통해 다뤄질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논지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그동안 발제자가 사회복지의 방향성에 대해 일관되게 공부하고 고민해 온 노력들이 하나의 체계로 구성될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된다.

다만 그동안 제시해 온 대안들이 나름대로 합리성과 바람직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적용되지 못하고 변화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들의 반복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와 그 배경에 대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이 글에서 지적하는 여러 문제현상들 자체보다는 이런 현상들을 유발하는 이면의 구조들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유들이 궁금하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합리적 선택이론이나 경제학적 선택이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안되는 정책의 구현에 힘을 실어줘야 할 선거에서조차 왜 사람들은 자신들의 계급이나 이익을 배반하는 비합리적 선택을 해왔는지,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겨져 있다.

\* 백석대학교 교수 · 사회복지학 mmchoi@bu.ac.kr

그런데 이 이상의 수준에서 필자가 발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에는 일정한 한계를 느낀다. 그 이유는 발제의 내용이 사회복지 전반을 아우르고 있기는 하지만 정책 수준의 논의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실천 학자로서 필자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한다는 것은 능력 밖의 일이 될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사회복지의 새판 짜기의 논의에서 사회복지현장이나 사회복지전문직 등을 포함한 사회복지실천의 이슈들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은 것 같다. 또한 학회 측에서 4명의 토론자 중 한 명으로 필자와 같은 실천분야의 학자를 포함시킨 이유는 정책 분야 토론자들과 달리 이러한 논의를 사회복지실천 쪽에서 좀 더 전개해 주기를 기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 토론의 기회를 빌어 사회복지실천학자로서 사회복지실천에 초점을 둔 새판에 대한 논의를 조금 더 진전시켜 보고자 한다.

## 1. '낡은'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규정

우선 새 판을 논하기 위해서는 현 판, 또는 낡은 판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무조건 과거라고 해서 다 낡았고 교체되어야 한다고 규정해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즉, 과거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것은 계속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시대에 적합하거나 유효하지 않다는 의미를 내포한다면 새로운 변화가 요구된다. 다만 현 것과 새 것에 대한 규정은 각자의 정치적, 학문적 입장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기서는 현재 사회복지실천과 관련된 우리사회의 모습들과 그에 대한 사회복지실천의 대응을 비판적 관점에 입각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합리적 선택을 전제로 한 정책적 대안이나 인간에 대한 자아심리학적 접근과는 다른 입장에서 시장우선의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온 Foucault, Lacan, Bauman 등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을 밝힌다.

이러한 입장에 의거해 볼 때, 우선 현재 한국사회가 추구해온 시장경제 발전의 이면에 드리운 문제들을 주목하게 된다. 물론시장경제 발전에 따라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이 될 정도로 경제적 생활수준이 개선되고 대외적 위상이 높아졌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그에 따른 부작용을 이해하고 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소홀히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최근 OECD(2017)는 회원국들의 사회적 안정성과 통합성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Society at a Glance>를 통해 잘 드러난다. 이에 따르면 OECD 35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는 경제지표에서는 상위권에 속하지만 출산율과 노인빈곤율 최하위, 자살률 1위, 주관적 건강도와 50대의 사회적 고립감 최하위, 미래불안과 사회관계 하위권 등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한국사회는 경쟁과 시장 논리 하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가운데 사회적 신뢰의 토대가 취약하고 국민의 불안감과 고립감이 깊어가며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그 어느 국가보다 많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한겨레, 2016).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해야 할 사회복지실천이 그동안 이러한 사회적 주류의 흐름에 저항하거나 새로운 조류를 형성해 왔는가. 오히려 사회복지실천현장 또한 자유와 경쟁을 핵심으로 하는 시장기제의 질서에 의해 지배되고 있지는 않은지 하는 것이 본 토론자의 견해이다. 이와 같이 판단하

는 몇몇 그 구체적 사례들을 들면 다음과 같다.

- 2013년에는 가장 안정적이고 전망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자살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그에 대한 대응은 힐링캠프와 같은 방식에 머물렀고 업무의 강도는 계속 증가해 왔다. 오히려 효율성의 목적으로 도입된 계량적 성과평가제와 업무전산화로 인해 사회복지사의 자율성과 정체성은 더욱 위협받고 있다(김수영, 2016; 김인숙, 2016).
- 2016년에는 사회복지사들 중에서도 전문성을 가장 인정받고 있다고 자부하던 수도 서울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들은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고용불안 해결을 요구하며 보건의료노조에 가입하여 전문가는 고사하고 노동자로서 기본 권리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파업 중 노숙과 단식을 감행하며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사회복지계 대부분은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소통도, 관심도, 연대도 부족했다. 결국 파업은 성공했다고 했지만 복수의 위탁과 계약 관계 속에서 약속이행의 책임자조차 찾기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2016).
-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사람을 만나고 관계 속에서 일하는 사회복지가 아니라 성과주의에 따라 평가 서류를 만들어 내는 'A4 복지'를 하고 있다는 자조가 끊이지 않는다. 현장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평가지표를 만들고 그 잣대에 따라 현장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교수들에게 괴리감과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으며 평가자의 모습으로 군림하는 학계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증가하고 있다(최명민 외, 2015).
- 사회복지실천이 프로젝트화되고 있다. 덕분에 사업이 조직화되고 효과성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지만 대신 평가기준에 맞지 않는 실천, 긴 호흡을 갖고 기다리며 가는 실천, 기본적인지만 꼭 필요한 사업들은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 하는 덜 중요한 사업이거나 쓸모없는 사업으로 취급받는 현실이다. 사업의 중요성이나 가치는 프로젝트로 따오는 금액으로 평가받으며 프로젝트가 채택되어 지원금을 받아야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문화가 팽배하고 있다(김교성 외, 2016).
- 학교에서 배운 임파워먼트와 현장에서 요구받는 '소비자 만족도' 사이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회적 부정의를 바로 잡고 약자를 위해 일하겠다고 현장에 들어갔던 제자들이 클라이언트의 폭력과 성희롱을 경험하지만 기관을 포함한 누구로부터도 적절한 보호도 받지 못 하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두려움과 원망이 쌓여 더 이상 사회복지사로서 일할 수 없을 것 같으며 울음을 터뜨리곤 한다. 사회복지사의 소진이나 클라이언트 폭력은 사회복지현장에서 더 이상 희소한 경험이 아닌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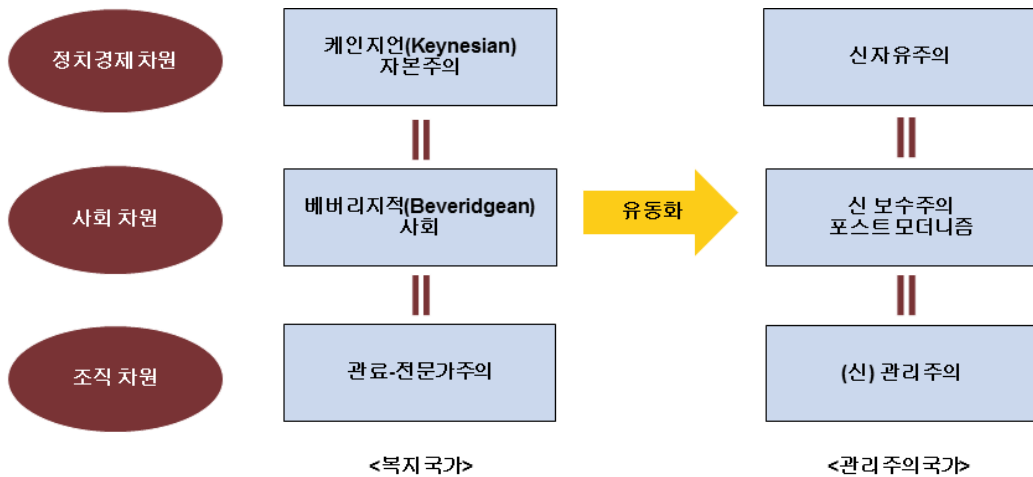
이들은 우연적이고 산발적인 현상들이라기보다는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최근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현상들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인 질서의 도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위의 사례들은 시장논리와 경쟁논리, 그리고 효율성 담론과 성과주의가 사회복지현장을 지배하게 되면서 사회복지의 본질과 정체성에 대한 위협, 분야별의 세분화와 공동체 의식의 저하, 사회복지사의 소진과 무기력 등이 나타나고 있는 단면들이라고 하겠다. 문제는 이렇듯 현재 사회

복지실천에서 보이는 양상들 자체 뿐 아니라 이 양상들이 우리 사회의 문제 양상들이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데에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에 접근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조차 신자유적인 방식을 벗어나지 못 한다면 그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있어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발제문에서 언급되었듯이 현 시점이 사회복지의 새판을 짜기에 적기라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 그러나 본 필자에게는 적기라는 의미가 적당한 때라는 의미를 넘어서, 사회복지의 본질과 정체성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방식의 기존 사회복지의 판을 새로 짤 수밖에 없는 막다른 시점이라는 의미로 다가온다. 한마디로 새 판을 짜는 일은 우리 시대의 사회복지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의무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 2. 분석틀과 그에 따른 문제점 분석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글에서는 기초발제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사회복지실천이라는 종속변수에 대한 논의를 확장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역시 논의의 틀이 중요할 것이다. 여기서는 발제문에서 활용한 논의의 틀 대신 Foucault, Clark와 Newman, Klikauer의 개념에 기초하여 김기덕(2016)이 구성한 근대자유주의 국가의 분석틀을 사용하고자 한다(〈그림 1〉 참조). 이 틀은 정치경제와 사회차원 뿐 아니라 특히 조직적 차원을 포함시킴으로써 사회복지실천현장에 대한 논의를 담보하기에 보다 적합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이다.



※출처: 김기덕, 2016

〈그림 1〉 근대 자유주의국가 통치성의 변화

이에 따르면 현 시대의 국가에서는 정치경제, 사회, 조직적 차원에서 기존의 복지국가와는 상이한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 정치경제적 심급을 주도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이다. 신자유주의란 강력한 사적 소유권과 자유시장의 원리 위에 서있다. 개인은 이러한 원리에 따라 인간의 복지를 추구하며 국가는 자유와 경쟁을 핵심으로 한 시장기제가 사회 전반에 적용되도록 질서와 규칙을 구축한다.<sup>1)</sup> 둘째, 이념과 사회적 관계 차원을 일컫는 사회적 심급은 신보수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이 사회적 균형의 핵심으로 설정되면서 개인의 선택과 책임, 공공보다는 사적 자원 발굴 및 활용 등이 사회적 담론으로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셋째,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의 물리적 기반이자 도구인 조직적 심급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즉, 신자유주의 시대의 조직은 수직적으로는 엄격한 예산 통제와 성과평가를, 수평적으로는 시장화와 경쟁관계의 연결망으로 재편된다(김기덕, 2016 : 5-8).

Bauman은 이러한 사회변화를 고체적 근대에서 액체적 근대로 전환이라고 명명하고 유동성이 증가한 액체근대에는 소비주의가 팽배하고 공동체가 약화되는 대신 개인화가 증대하며, 관료주의를 비판하며 등장한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오히려 관료주의와 관리주의가 강화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윤리적 관심과 규범성이 쇠퇴하고 전문가는 입법학적 지식인에서 해석학적 지식인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이일수 역, 2005).

우리나라도 IMF 이후 신자유주의의 질서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였고 이는 사회복지분야도 예외는 아니었다. 따라서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정치경제적 균형이 시장과 경쟁 원리로 작동하고, 사회적으로는 공공의 책임보다는 개인의 책임과 사적 자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며, 특히 사회복지가 작동하는 조직 차원에서는 관리주의의 도입에 의한 성과와 효율을 강조하는 추세가 강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김기덕·최명민, 2014). 특히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에 필요한 기본 제도들은 갖췄다 하더라도 그 질적 수준에 있어서 선진 복지국가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 했던 사회였기 때문에 사회구성원들이 경험하는 신자유주의의 여파와 그에 따른 부작용이 더 심각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특히 사회복지실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은 조직 차원의 관리주의이다. 원래 하나의 중립적 기법이자 도구적 의미를 가졌던 관리(management)는 이를 구성하는 기술, 훈련, 지식을 통해 사회 전반에 적용되어 주어진 문제에 최선의 해답을 제시한다는 것을 정당화하면서 이념으로서 '관리주의(managerialism)'로 발전해 왔다. 관리주의는 합리성과 효율성을 내세운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모든 조직의 주체들로부터 의사결정의 권위나 자유재량을 박탈해 버리고 관리자 대신 관리시스템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관리당하는 주체가 저항할 대상을 구체화하지 못 하여 저항성과 공격성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며 탈정치화되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신자유주의의 정치적 합리성과 경영 관리의 규범의 결합물인 관리주의는 사회복지와 같은 휴먼서비스 조직을 변질시킨다. 즉 클라이언트는 소비자로 전환되어 선택과 그에 따른 책임을 요구받으며, 조직에서는 실천가나 활동가보다 '관리자의 유능성'이 강조된다. 또한 전문가에 요구되는 바가 전문적 경험이나 자율성, 숙련성보다는 '지침이나 규정'을 정확히 수행하는지 여부가 되며,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도 나눔보다는 '배당', 행복

1)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에서는 자유라는 개념이 강조되기 때문에 국가개입이 최소화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 신자유주의는 시장과 경쟁원리가 주요 원리로서 사회전반에 작동되도록 하는 국가의 개입을 통해 전개된다(오토르망, 2012).

보다는 '풍요', 공동체 정신보다는 '효율'이 된다. 결국 이렇게 관리주의에 따른 사회복지의 본질을 위협하는 결과로 귀결된다(김기덕, 2016 : 9-11). 한편, Ritzer(김종덕, 2003)는 현대의 성공적인 관리방식은 소비자 욕구를 신속히 채워주는 '효율성', 서비스 요소를 정량지표로 만드는 '계산가능성', 표준화와 전산화를 통한 '예측가능성', 과정 참여자들에 대한 '통제가능성'과 같은 맥도날드의 경영원리와 동일하다고 제시했는데 Dustin(2007)은 이런 기제들을 통한 효율성 확보가 사회복지의 기계적 기준이 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라는 경제적 공간에서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받는 클라이언트의 삶은 더욱 버거워지고 있다. 예를 들어 경제적 효용성이 없는 만성정신질환자들은 가족과 지역사회라는 사회적 공간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으며 전문 서비스 기관과 조직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기관들조차 성과와 효율, 수익의 원리에 맞지 않을 때 이들을 외면하기 때문에<sup>2)</sup> 결국 이 시대의 호모 사케르로 추방당하거나 범죄자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 분석된 바 있다(최명민 외, 2016).

이러한 구조 속에서 클라이언트만 고통 받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현장에 도입된 평가제도와 그에 따른 줄 세우기와 인센티브는 기관 간 연대를 약화시키고 전문직 자율성을 축소시키며 사회복지사들을 스트레스와 과로에 내몰고 평가를 잘 받기 위한 비본질적인 노하우를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역으로 평가 자체를 불신하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일과 삶에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클라이언트에게 돌아가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최명민 외, 2015).

한편 최근 사회복지실천에서 사례관리가 유행하고 있는 흐름 역시 이러한 사회적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례관리는 사실상 공공지출의 감축, 자조와 지역사회의 자립, 작은 정부와 지방분권화의 흐름에 따라 등장하였고, 도구 합리성과 표준화 방식, 혼합경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의 관리주의의 흐름에 적합한 실천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사례관리자들은 자신이 관리의 주체이자 객체로서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관리자이자 통제자로서 기능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로서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기 쉬우며, 비용절감과 이용자 만족이라는 상호 모순적 목표, 그리고 이상적 조건에 따른 효과성과 현실적 조건 사이의 괴리로 인하여 소진에 노출될 위험도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최명민·정병오, 2015).

그러나 그동안 한국 사회복지실천에서는 중립적이고 기계적인 생태체계이론에 천착해 있으며 주어지는 사회적 질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적응'하고 '성과'를 도출하는데 급급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사회복지실천에서 비판이론에 대한 관심과 적용은 미미한 수준이며 매우 보수적인 자세를 취해 왔다고 할 수 있다.

2)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조차 중증정신질환자 사업은 그 비중이 감소되어 왔다.

### 3. 사회복지실천의 새 판을 위한 대안 모색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는 대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우선 명심해야 할 것은 개인과 개인들 간의 관계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실천은 개별화의 원리에 따라 실천을 경유해 나가야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실천은 보편이론의 지도 하에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실천은 고립되고 추상화되어 그 효과와 의미를 제대로 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Althusser(홍준기, 2003)는 사회적 관계와 힘은 추상적인 차원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현상들이며 사회적 효과는 개인 속에서 발현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구체적 개인에게 나타나는 이데올로기의 효과는 그 개인이 자신의 이데올로기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는 주체적, 개인적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없이는 이론적 완전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개인의 윤리적 결단과 변화, 개인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정신분석적, 미시적, 관계적 효과를 경유한 사회적 실천이 없이는 모든 사회의 변화는 추상적일 뿐이다. 결국 모든 개별화는 총체성과 통합성에 다름 아니며 모든 보편성은 특수화된 보편성일 뿐이다(홍준기, 2003).

이 지점에서 사회복지실천은 사회복지정책 혹은 사회철학과 변혁이론과 접합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접합의 중심에서 바로 정신분석학이라는 국지적 대상을 보편적인 철학으로 풀어내는 자크 라강(Jacques Lacan)에 다시 주목하고자 한다. 신자유주의와 관리주의가 우리 사회의 절대적인 법이자 로고스로 간주되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주체들의 정체성 역시 이러한 이념으로 채워지고 있는 이러한 맥락에서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중요한 이론적, 실천적 도구로 자리매김 되어 왔던 정신분석학을 철학, 인류학, 언어학의 이론을 받아들여 사회분석과 비판의 도구로 승화시킨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Lacan의 이론은 현 상황에서 사회복지실천의 새판 짜기와 대안설정에서 있어 중요한 함의를 제공해 준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체의 정체성과 무의식 그리고 욕망을 다루는 Lacan의 이론은 많은 의미를 던지고 있다. 그는 자신이 상징계라고 칭한 현실 사회에서 우리 주체들에게 있어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존재인 '대타자' 역시 우리 삶이 가진 욕망을 충분히 해결할 수 없는 결여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즉 대타자로 간주되는 신자유주의 역시 불완전한 존재들이며 이러한 대타자들이 결코 이러한 상징계에서 살아가는 우리 주체들의 진정한 욕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존재들이다. 결국 그의 논의를 수용한다면 우리가 자본주의 특히 저성장의 도그마에 의존하면 할수록 우리 주체의 소외를 심화시킬 뿐이지 진정한 주체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의 현실적인 삶인 실재는 신자유주의라는 상징계가 부과하는 기표적인 질서에 동화되지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진정한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의 상징화를 요구함으로써 상징계의 지배력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김석, 2007: 238).

필자는 이러한 대타자의 결여와 불완전함을 가장 절실히 인식하면서 자신의 삶의 의미와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주체들은 바로 후기 근대사회에서 쓰레기로 소외되고 있는 사회복지 대상자와 클라이언트

언트들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들과 전문직 관계를 맺으면서 역시 신자유주의와 관리주의에 의해 자신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삶과 비전을 상실하고 있는 전문가들 역시 능동적인 저항의 중요한 주체세력의 후보라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복지 실천의 새 판 짜기는 사회복지정책과 복지국가의 새 판 짜기와 긴밀하게 결합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미 이러한 신자유주의 질서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경쟁하기보다 상호 협력하며 평가지표로 성과를 인정받지 못 하더라도 새로운 가치이자 사회복지 고유의 정체성을 창의적으로 실현해 가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예: 김동찬, 2010; 최명민 외, 2015; 정병오·김세진, 2016, 세바사 <https://www.facebook.com/SebasaKorea/?fref=ts> 등). 물론 이러한 흐름들이 전체의 흐름에서는 미약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견고한 질서에 대한 도전은 이러한 작은 구멍 내기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구멍들이 새 판을 짤 수 있는 시작점이자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복지계는 어떻게 이러한 가능성을 창출해 내고 이들을 지원하고 격려하며 더 큰 세력으로 묶어낼 수 있을까?<sup>3)</sup>

#### 4. 맺는말을 대신하여

그 가능성은 첫째, 우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들과 실제 우리의 실천에 일관성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것, 둘째, 현 상황의 절박함을 인식하는 것,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실천해 가는 것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Bauman의 목소리로 본 토론의 글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사람들에게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등, 상호 연대, 우정이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적 행동이나 실질적인 삶의 전략을 살펴보면 우리가 제시한 것과 완전히 다른 가치에 따라 행동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 이상과 현실, 말과 행위의 간극이 얼마나 넓은지...이 간극의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그것은 현실이라는 제약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의 극복은 상황이 절망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패배했다는 것이 임박한 파국에 맞서 승리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상황을 무시함으로써 승리가 저지되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다. 세상은 파국의 예언자들로부터 보호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시도해 보지 않는 한 거듭해서 그리고 더욱 더 열심히 시도해 보지 않는 한 그 생각이 틀렸는지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Bauman, 안규남 역, 2013 : 110-115에서 요약).

3)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지는 특별기획세션 “한국사회복지발전을 위한 Field Forum”에서 다루지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김교성·최명민·임정기·이현주, 2016, “사회복지사는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는가?”, 『청년의 열정으로 다시 30년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협회 창립 30주년 세미나 자료집』, 11-89.
- 김기덕·최명민, 2014, “바우만의 근대성 이론을 통한 한국사회복지실천의 유동성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6(4): 53-75.
- 김기덕, 2015, “대안적 비판이론으로서 인정 패러다임의 사회복지적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67(4): 325-347.
- 김기덕, 2016, “신자유주의 시대의 관리주의 : 그 맥락과 의미”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15.
- 김동찬, 2010, 『복지수상록』, 서울: 푸른 복지.
- 김석, 2007, 『에크리 : 라캉으로 이끄는 마법의 문자들』, 파주: 살림.
- 김수영, 2016, “공공사회복지에서의 관리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7-74.
- 김인숙, 2016,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일 조직화 : 공공담론의 역설과 실패”,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24-175.
- 김종덕 역, 2003,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화 : 유토피아인가, 디스토피아인가』, Ritzer, G., 1993, *The McDonaldization of Society*, 서울: 시유시.
- 안규남 역, 2013,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 가진 것마저 빼앗기는 나에게 던지는 질문』, Bauman, Z. 2013, *Does the Richness of the Few Benefit Us All?*, 파주: 동녘.
- 이일수 역, 2005, 『액체근대』, Bauman, Z., 2000, *Liquid Modernity*, 서울: 강.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2016, 『서울의 정신건강증진센터 실태로 본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공공성 강화 과제』,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자살예방센터 파업 긴급토론회 자료집.
- 정병오·김세진, 2016, “사회복지실천현장의 고뇌와 도전 : 현장의 동상이몽”,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76-206.
- 최명민·임정기·김승연·김교성, 2015,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사회복지사는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바라는가?”,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7(3): 1-26.
- 최명민·정병오, 2015, “푸코의 계보학을 활용한 사례관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학』, 67(4): 301-324.
- 최명민·권자영·김기덕, 2016, “정신보건영역의 탈시설화에 대한 사회적 공간이론의 탐색적 적용”, 『한국사회복지학』, 68(4) : 225-246.
- 한겨레, 2016, “OECD 사회지표로 본 한국, ‘최악’ 위험사회로 치달아”, 201년 10월 12일 .
- 홍준기, 2003, “주체 없는 과정인가, 과정으로서의 주체인가: 정신분석학과 알튀세르”. *라캉과 현대정신분석* 5(1): 167-200.
- Dustin, D., 2007, *The McDonaldization of Social Work*, Hampshire : Ashgate.